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 광주에 문 연다

전국 세번째 12월15일 개소...훈련실·3D프린터실·스튜디오 갖춰 연간 120명 수용...디지털 역량 개발·IT 전문가 양성·고용 확대 등

수도권 이외에 광주에 처음으로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가 문을 연다. 정보기술(IT) 직무 관련 훈련을 통해 역량있는 지역 장애인 정보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는 다음달 15일 광주 서구 양동에 광주디지털훈련센터를 개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판교디지털훈련센터, 2021년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 이어 전국 3번째이지만 수도권 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광주가 최초다.

이번에 문을 여는 광주디지털훈련센터(총 면적 2673.1㎡·전용면적 1539.71㎡)는 훈련실과 3D 프린터실, 다목적실, 스튜디오를 갖추고 연간 1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광주디지털훈련센터는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개발 ▲장애인 IT전문가 양성 ▲IT분야 취업 확대 등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특화산업과 밀접한 분야인 'SW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VR 미디어콘텐츠'

츠', '디지털 리더러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는다는 것이다.

SW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기초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법을 배우고, AI빅데이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 분석 관리, 데이터 시각화,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및 AI에 관한 내용을 숙지한다.

VR미디어콘텐츠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이미지를 편집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미디어를 생산 및 공유, VR 미디어 제작법을 익히며, 디지털 리더러시는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무 오피스 등을 배우게 된다.

18세 이상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 등 장애인은 연중 수시로 센터에 입학할 수 있다.

훈련 기간은 장애인의 숙련 정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달라진다. 입학한 모든 장애인은 훈련비가 전액 지원되고, 교재 및 실습재료 등을 제공 받으며 훈련수당을 지급 받는다.

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017년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개소해 광주지역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직

무훈련과 사회성 훈련 등을 실시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발달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했다.

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들은 지난달 31일 기준 알선취업자 548명, 지원취업 222명, 재정일자리 920명으로 총 1690명에 달한다.

또 공단은 장애인 고용에 앞장 선 기업들에게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업 3.6%)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공단은 고용장려금을 기업에게 경중 장애인은 1인당 30~40만원, 중중 장애인은 1인당 60~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공단이 지난해 지역 사업체에 부과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약 96억원이다.

원종호 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공단에서 교육받고 취업한 장애인분들은 전문성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업 특성을 살려 맞춤형 연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환경부,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영농단체와 12월16일까지 수거 취약지역 우선 지원

환경부는 주요 영농단체와 함께 오는 12월 16일 까지 추수가 끝난 농촌지역의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을 집중 수거한다.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 기관이 체결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에 따라 수거 취약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영농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약 9000여곳에 설치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에 주민들이 배출하면, 재활용시설·소각업체 등에 보내져 처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민 또는 마을 단체에 수거보상금을 지원한다.

수거보상금 단가는 폐비닐 kg당 100원, 폐농약 병 1개당 100원, 폐농약봉지 1개당 80원이다.

이번 집중수거기간 동안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총 1000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사육시 허가 받아야 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교란생물 지정...내년 4월까지 신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을 내년 4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지난달 28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늑대거북은 국내에 천적이 없어 생태계 위협성이 크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침입외래종'으로 인간에게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사육·재배·유통·보관 등이 금지된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도 사육·재배하려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늑대거북의 사육포기를 원할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에



늑대거북
개체를 인계하면 된다.
관련 서식과 신청 방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독거어르신과 총장로 4·5가 골목 투어 동구 총장동 주민자치회, 치매예방 교실 운영



독거어르신들이 14일 광주극장 앞 '영화가 흐르는 골목'을 탐방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광주시 동구 총장동 주민자치회가 14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2차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했다.

치매예방 교실은 매달 1회 관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2차 치매예방 교실에서는 광주극장, 총장 22, 도깨비 골목 등 총장로의 오랜 역사와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총장로 4·5가 골목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투어는 총장로 골목관광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이수한 여군수 주민자치회장의 깊이 있는 설명으로 진행됐다.

임경숙 총장동장은 "항상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시는 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치매예방 교실에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참여자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WHO '고령친화도시' 광주 서구, 회원 재인증 2026년까지 자격 유지

광주시 서구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원 자격은 2026년까지 유지된다.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외부 환경 및 건물 ▲교통수단의 편의성 ▲주거환경의 안정성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보호 ▲여가 및 사회활동 ▲인적자원의 활용 ▲존중과 사회통합 등 8대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구는 지난 2019년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으로 첫 가입했다.

이번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고령친화도시 광주 서구'를 슬로건으로 6대 영역 54개 중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재인증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고령친화도시 광주 서구'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면서 "선진된 실행과제 추진에 힘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립공원 다중이용시설·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환경부·국립공원공단 12월9일까지 탐방안내소·야영장 등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2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립공원 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지구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안내소, 야영장 시설 등 탐방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내 다중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 시설, 소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국립공원 내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구조장비 1만1320점의 정상작동 여

부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점검기간동안 소방·산악단체 등과 합동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재해취약지구, 산사태취약지구 등 재난취약지구에서는 안전시설 유무 및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낙석과 토사 발생에도 대비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탐방객들이 안전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